

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— 검토보고 —

☐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광주민주화운동대상자와 그 유족등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법률에 맞게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“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”을 “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”로 하고 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”를 “5.18민주화운동부상자”로 개정(안 제2조2항)

☐ 검토의견

-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“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”의 명칭 및 일부내용의 개정에 따라 이를 개정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86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10. 5

제출자 : 예산군수

☐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광주민주화운동 대상자와 그 유족등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법률에 맞게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“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”을 “5.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”로 하고 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”를 “5.18민주화운동부상자”로 개정(안 제2조2항)

☐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·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

-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타자료

- 충청남도 세정과-7546(2004. 9. 1) 군세감면조례 개정안 허가 통보

예산군 조례 제186호

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예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”을 “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
법률”로 하고, 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”를 “5.18민주화운동부상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[illegible]

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— 검토보고 —

☐ 제안이유

-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,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(단위 : m^2 , 천원)

구 분			당 초			변 경 (추가)			계		
			건수	수량	지가산정액	건수	수량	지가산정액	건수	수량	지가산정액
취득	계	토지	32	29,062	3,025,404	△4	2,762	△1,516	28	31,824	3,023,888
		건물	3	703.5	489,200				3	703.5	489,200
	매입	토지	30	17,452	1,511,586	△5	△2,321	△9,141	25	15,131	1,502,445
		건물	3	703.5	489,200				3	703.5	489,200
	교환취득	토지	2	11,610	1,513,818				2	11,610	1,513,818
		건물									
	기타취득	토지				1	5,083	7,625	1	5,083	7,625
		건물									
처분	계	토지	21	28,134.2	1,676,024				21	28,134.2	1,676,024
		건물									
	매각	토지	20	16,524.2	92,843				20	16,524.2	92,843
		건물									
	교환처분	토지	1	11,610	1,583,181				1	11,610	1,583,181
		건물									

☐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
- 지방재정법 제77조
-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

□ 검토의견

-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추사기념관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으로 당초 매입하고자 하였던 장소(용역사에서 제시)는 토지의 규모, 형상 등으로 보아 제1지구, 제2지구 공히 건물배치가 불가하여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이는 용역수행과정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관련부서의 협조 내지는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바
- 행정의 효율성, 적시성확보 차원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